

포천사회 知識人 ⑤⑤

경북대학 김이현 교수

“포천의 물 더 이상 오염되면 안된다”

성실한 사람이면 어떤 일이든 해 나갈 수 있다

“여로부터 포천은 산 좋고 물 좋은 곳으로 유명했다. 최근에는 산은 좋은데 물이 좋지 않은 것 같다. 그것은 산재해 있는 소규모 중소기업에서 배출하는 각종 오염원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들 알려진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들 오염원을 배출하는 업체들을 한곳에 모아 공단을 조성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포천은 도로문제가 심각하다. 민자고속도로가 설계계획단계에 와 있다. 그러나 43번 국도의 극심한 교통체증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포천의 심각한 문제는 더 있다. 포천시민들은 포천을 앞으로 더욱 개발해 나갈 것이냐? 자연환경을 그대로 보존해 나갈 것이냐?를 결정해야 한다. 그래야 한탄강댐 문제가 해결된다. 개발을 하기 위해서라면 한탄강댐은 다목적댐으로 건설해야 한다.”

최근 포천사회에 대해 전공과 관련하여 이같이 밝힌 경북대학 김이현(45·사진) 교수는 경북 안동시 안동초등학교, 경안중학교, 안동고등학교를 나와 단국대학교 토목공학과에서 공학사, 공학석사, 공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8년 전국에서 최초로 개설된 경북대학 토목설계과 교수로 부임한 김 교수는 대학원에서 수공학을 전공했다. 김 교수는 현재 경북대학에서 수리학, 수공구조물설계, 수문학, 상하수도공학 등의 과목을 교육하고 있다.

전공관련해 포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일에 대해 김 교수는 오염된 수질을 개선하는 일에 전문 할 수 있다. 기업가, 가정에서의 오수, 도시계획에서의 오수처리 등 수질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 특히 산재해 있는 오염매출공장의 집단화를 통해 수질환경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경북대학 토목설계과는 건설정보환경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매년 고등학생들을 위한 건설사진공모전을 개최하고 있다. 또 고등학교에서 실시한 취업박람회에도 참가해 토목에 대한 홍보에 나서고 있다.

수질개선을 위한 공단화 추진도 포천지역에서는 문제가 노출되고 있다. 영세업체들이 쉽게 공단에 입주할 수 없다는 점이 다. 공단조성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따라서 포천시는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영세업체들이 입주해 생



산성을 높이고 환경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한다.

김 교수는 백운계곡 하천정비사업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계곡은 물살의 흐름을 제어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큰 돌이 형성돼 있다. 그런데 하천정비사업을 통해 하천에 있는 돌을 모두 깨내 제방을 쌓았다는데 문제가 있다. 이것은 물의 흐름을 빠르게 해서 계곡으로서의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김 교수는 하천의 네트워크화를 강조한다. 하천을 서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전거도를 만들어 서로 이동이 가능하도록 한다. 모든 도시는 하천을 끼고 발달돼 있다. 따라서 도시축과 하천축을 서로 연결해 나가야 한다.

평소 학생들에게 ‘성실성·인간성’을 강조하여 교육하고 있는 김 교수는 기업체에서 사람을 보내달라고 요구 할 때도 실력이 좋은 사람보다는 성실한 사람을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성실한 사람이면 어떤 업무든 한 두 번 설명하면 다 할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건설정보환경과 학과 장으로서 김 교수는 지도교수의 시간을 별도로 마련해 학생들과 상담을 통해 성실성을 강조하고 있다.

김 교수는 앞으로 연구계획에 대해 최근 이상기후현상으로 건축물에 이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상기후에 적응 할 수 있는 수공구조물을 설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의 기상상태로는 기존의 수공

구조물이 견디지 못할 수 가 있다. 봄, 가을이 짧아지고 여름, 겨울이 길어지는 아열대성 기후로 변화하고 있다. 올 여름에는 특히 기상청에서도 예상하지 못하는 개발다성 폭우가 내렸다. 이와 같은 기후를 감당해 낼 수 있는 수공구조물 개발에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전공관련 포천시민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물 부족국가라는 사실을 알고 물을 절약하는 생활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수자원부족에 대한 심각성을 알려주고 싶다. 너무 쉽게 생각하는 물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강조하고 싶다.

포천신문이 더 집중해서 보도해야 할 내용에 대해 김 교수는 지역신문이라는 기존의 선입견을 바꿀 수 있는 다양한 편집으로 알찬 내용이 많은 것 같으며 열심히 뛰는 만큼 좋은 기사가 나온다는 생각으로 더욱 노력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대한토목학회, 한국수자원학회, 도시환경연구소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기사시험문제 출제위원, 포천시 점경지역발전기획단 자문위원, 양주시 도시계획위원, 경기도 재해영향평가위원, 포천시 온천개발자문위원, 포천시민간자문기술단 자문위원, 서울특별시 지하철건설본부 자문위원, 한국방재학회 정회원, 경기도 친환경 신도시자문단 위원, 포천시의회 자문위원, 한국물포럼 정책위원, 남양주시 민간기술자문단 위원, 경기도 북부발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중이다.

한편, 김 교수가 그동안 발표한 주요 논문 및 저서는 다음과 같다.

- ▶충적사행천의 흐름해석(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회귀분석법을 이용한 총적하천의 수로양상에 관한 연구(경성전문대학 경성논총, 창간호)▶만곡수로서 수리구조물에 의한 수면 및 하상의 변동 특성(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수공구조물과 통수단면적의 홍수위에 미치는 영향(경북대학 경북논총, 제7집)▶중랑천 시험유역의 운영 및 자료관리(건설교통부 제2회 수문관측 심포지움)▶기초수리학(1998, 구미서관)▶수문학(제2판, 2001, 구미서관)▶수리실험(2002, 구미서관)▶환경공학(2003, 새론)▶상하수도공학(2004, 기문당)▶상하수도공학(2005, 구미서관)▶수문학(2006, 구미서관)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취재파일

미군공여구역 특별법 어떻게 진행되나

중앙부처 비수도권 지역반발 무산될 위기

포천시 등 경기북부권 지방자치단체 반발 움직임



하승완 본지 취재국장

지난해 3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이 제정되어 경기북부권 주민들에게 주었던 1단계 종합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있다.

포천시를 비롯한 경기북부지역은 점경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한 군사시설보호법과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의 중첩 규제로 지역발전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중첩규제는 첨단 대기업 유치는 물론 대학이나 신설되는 것조차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4일 행정자치부는 중앙발전위원회 심의를 갖고 전국 13개 시도에서 제출한 1단계 발전종합계획을 확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관련 예산배정에 관해 기획예산처가 난색을 표명함에 따라 1단계 발전종합계획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무기한 연기됐다.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발전종합계획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려면 2008년도 예산에 반영해야 하는데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10월 예산편성 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의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규제를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으로 풀어야 한다. 그래서 정성호 국회의원은 올 6월5일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해 현재 법사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중이다. 주요 법안내용은 반환공여구역 잔여 환경오염복구 예외 허용, 반환공여구역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종합계획 반영사업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적용배제, 산업단지 공급물량 별도허용, 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인허가 등 의제사항 추가, 소관부처가 불명확한 지원사업의 주무부처(행자부) 지정 등이다.

즉, 수도권의 낙후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점경지역과 반환공여구역 등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해 규제를 풀어야 한다. 이것이 경기북부지역이 가장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나 비수도권지역 국회의원들은 수도권 정책과 개발제한 구역제도의 근간을 훼손한다며 7월초부터 지역균형발전협의체를 구성해 1천만명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게다가 중앙부처에서 예산배정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을 뿐 아니라 2008년도 지원예산 편성이 불투명한 상태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이 불투명해지자 경기도와 경기북부지역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20일 경기도 주한미군 공여구역 자치단체장협의회는 모임을 갖고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지원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건의문에서 자치단체장협의회는 “경기도는 전국 미군 공여구역의 87%를 차지하고 있으며 군사시설보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의 중첩규제로 대기업을 물론 대학신설하는 것조차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단체장협의회는 “지난해 3월 특별법과 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많은 기대와 희망을 가졌다”면서 “그러나 막상 제정된 특별법은 주민들의 열의를 저버린 채 당초의 취지와는 달리 국가예산 지원의 한계, 개발법 등의 태생적인 문제점을 안고있다”고 강조했다.

단체장협의회는 “건설교통부 등 중앙부처는 주한미군 반환공여 구역의 특수성을 인정하지만 특별법 개정안은 수도권정책과 개발제한 구역 제도의 근간을 훼손한다면서 특별법 개정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면서 “관계부처도 특별법에 의한 예산증액지원 등에 난색을 표명하는 특별법 제정이유를 모르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미군 기지를 이전하는 평택에는 관련법을 개정하면서까지 산업단지 기반시설 국비지원은 물론 430만평의 공장물량을 별도 배정하는데 반해 정작 미군이 떠나가는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의 입장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또한 현행 공여구역 지원 특별법이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되자 자치단체들이 민간자본을 유치해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외면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자 단체장협의회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된 법 개정안 처리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공여구역 지원 특별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지역상공인과 지역주민들의 힘을 모아 공여구역 지원특별법 개정운동을 펼치겠다는 뜻을 표명했다.

지난 27일에는 경기북부상공회의소에서 김문수 경기지사과 경기북부단체장, 지역구 국회의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나라당 경기북부지역 당정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도 미군공여 구역 특별법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한 지역구 국회의원은 건설교통부와 비수도권 지역 국회의원들이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반대하고 있어 미군공여 구역 특별법 개정이 어렵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비수도권 지역 국회의원들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할 경우 국토균형개발에 저해된다는 입장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군공여 구역 특별법 개정은 물론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이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다.

29일 경기북부시·군의회 의장협의회도 모임을 갖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공동대처하기로 했다.

의장협의회는 지난해 특별법이 제정되어 지역발전이 앞당겨 질것으로 기대했으나, 개발법에 의한 규제로 실질적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정성호 국회의원이 특별법 개정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으나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이며, 지난 20일 경기도 주한미군 공여구역 자치단체장협의회에서 그린벨트 해제 등 토지이용 규제 완화, 산업단지 공급물량 별도 배정, 4년제 대학 신설 허용 등 공여지 개발을 위한 규제완화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고 말하고 경기북부지역협의회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미군공여구역 특별법과 관련해 1단계 발전종합계획 시행계획에 따라 지난해 포천시가 경기도와 행정자치부에 제출한 사업은 장암철도 차량기지 유지사업 등 21개 사업에 12조6천억원 규모다. 이중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된 사업은 일동면과 영북면, 이동면지역을 포함하는 포천시관광레저개발사업 13,879,425㎡(420만평), 주요간선도로망(지방도로) 확장 17,78km, 포천시사거리 순환도로개설(도시계획도로) 1.87km, 산북면 덕둔리 관광개발사업 815,621㎡, 포천기구나산단단지조성 266,600㎡ 등 6건에 3조6천억원 규모다.

물 부족 국가라는 현실인식으로 물 절약에 앞장서야



아놀드파마 우산·타올 갤러리

포천점

개업·결혼·칠순·돌·공장이전·답례품·각종 행사용



아름다운 피부를 원하는 모든분들에게



천연 샤휴코롱·로션·삼푸·비누·바디클린저 등

포천시 설운동 16-16 ☎ 031)542-8531 / FAX 031)542-8532